

##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 평가

홍 성 국\*

- I. 문제의 제기
- II. 북한 자체 식량공급의 대조건
- III.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 평가
- IV. 맺음말

### 요 약

북한 식량공급의 특징은 첫째로 90% 이상 자체 생산에 의존하고 있고, 둘째로 시기에 따라 매우 불안정하며 셋째로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에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상황 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생산한 곡물 중에는 약 25%의 비식량용 곡물이 있다. 이는 아무리 북한이 식량난에 처해 있더라도 경제 및 영농 활동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몫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확한 연간 식량공급능력은 곡물공급능력 464만 톤의 75% 수준인 348만 톤이다.

북한은 식량을 균등분배가 아닌 성분과 계층에 따라 정치적으로 차등분배한다. 우선공급대상인 정치적 핵심계층은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데 이들에게 연간 142만 톤이 공급되고, 일반주민에게는 206만톤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량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김정일과 당에 대한 충성과 체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대다수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광범위하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7.1조치 이래로 북한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모든 경제단위에 대해 물량목표(物量目標)가 아닌 액상목표(額上目標)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식량소비를 기준으로 한 북한의 가구당 최저 생계비는 화폐개혁 이후 20배 이상, 가구당 명목 임금소득은 10배 정도 증가하였으므로 그 격차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은 화폐개혁 이후 식량공급 부족으로 북한주민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로 복귀하여 경제강국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최저 생계비를 현 수준보다 1/15 정도 낮추거나, 아니면 주민의 임금 수준을 15배 이상 높여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은 취약하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수록 자체 식량 공급능력 확대에는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자체 식량공급능력 약화는 체제의 약화를 자초할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이 봉착한 정치경제적 딜레마이다.

## I. 문제의 제기

북한에 있어서 식량은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요소가 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식량 배급이 중단되어 기본적인 생계 유지마저 어렵게 되면, 북한주민은 아무리 정치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김정일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sup>1)</sup> 그러므로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들이 대내외에 선전 선동하는 자신감 있는 정치적 목소리는 오히려 북한의 중앙집권력이 약화되어 있고, 나아가 체제 유지에도 빨간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논리상 역설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지금까지 흔히 분석·평가해 왔던 북한의 곡물수급사정에 대해 단순히 반복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sup>2)</sup> 본고의 목적은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하여 그 연속선상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전제로 할 경우, 그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식량공급능력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것은 식량이 체제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체제 지탱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 자체의 식량공급능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유지 여부의 윤곽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이것은 2002년 7.1조치에서도 발견된다. 7.1조치의 핵심 내용이 물가인상 조치인데 이 때 전반적인 물가를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했기 때문만 보아도 북한 체제에서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읽을 수 있다.

2) 2010년도 북한의 식량수급사정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제11권 제4호(2010.1월호) 참조.

이를 위해서 우선 최근의 북한경제 동향을 점검해 볼 것이다. 최근의 북한경제 동향은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 공급능력 도출을 위한 ‘주어진 제약조건’(given constraint condition)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경제 동향을 통해 북한의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식량공급능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북한경제 동향은 이론적으로는 분석을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가정(전제조건)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이 아니라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공급능력을 분석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수급사정에 대해서는 매년 많이 취급되어 왔으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분석이나 평가를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분석 목적과 관련하여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공급능력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주목할 것이다.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공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그 규모를 파악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자체 생산량은 물론 외부 도입량까지 포함되나 개념상 대외지원은 제외된다. 북한의 자체 식량공급능력은 이완된 사회주의 체제 정비 및 강화를 전제로 분배적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 공급능

력 자체는 물론 분배방법이 공급능력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고 소비적 측면에서도 식량공급능력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능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생계비 및 실제적인 식량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식량공급 관리 능력이 저하되면, 같은 양의 식량이라도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며 이것은 북한 식량공급능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자체 식량공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적 한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북한 자체 식량공급의 대조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북한경제 동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회주의로의 복귀 노력이 전에 없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 잔재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sup>3)</sup>고 강조하고 있다. 즉 개혁·개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로의 회귀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7.1조치 이후 2003년

3) 2009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까지는 북한당국도 시장적 요소에 대해 나름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경제난, 특히 식량난을 북한당국 자체의 힘으로 지탱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남한을 비롯한 외부 지원에 힘입어 경제사정이 나아지자,<sup>4)</sup> 다시 집단주의, 자력갱생, 독립채산제 등 그동안 잠잠했던 사회주의적 용어들을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사회주의 원칙 고수 및 그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사회주의로의 회귀가 착수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보다 선전 선동의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비가 본격화된 것은 2008년 하반기 김정일이 발명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후계자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50일 전투, 100일 전투, 장마당 통제, 화폐개혁 등 각종의 경제조치들이 잇달아 추진됐다. 이들 조치들은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150일 전투'는 사회주의 노력경쟁이라는 점에서, 장마당 통제는 근로자들을 공장기업소로 복귀시켜 집단주의를 부활하겠다는 의미에서, 화폐개혁은 개인의 상업자금을 근절하겠다는 의미에

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정비 및 복원 작업은 선군정치 아래 북한의 핵개발을 추진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과학기술중시노선을 표방하였다. 과학기술중시노선은 김정일의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나온 것이다. 과학기술중시노선 역시 겉으로 보기에 북한인민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인민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핵 개발을 염두에 둔 과학기술중시노선이었다. 과학기술중시의 실제 목적은 인민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핵 개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8번째의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등장 이래 북한당국은 선군정치를 통해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지금도 2012년까지 이들을 모두 완성하여 강성대국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사상 무장으로 정치강국을 이루었고 핵 개발로 군사강국을 완성하였으

4)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04년 북한의 2004년 1인당 GNI는 915 달러로서 김정일 정권 출범 바로 전해인 1993년의 1인당 GNI 969 달러에 거의 육박하였다. [http://www.bok.or.kr/보도·법령자료/북한경제자료/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2010.5.11\)에서](http://www.bok.or.kr/보도·법령자료/북한경제자료/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2010.5.11)에서) 달러화로 환산.

니, 이제 남은 것은 경제강국 건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당국이 말하는 경제강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얼핏 보면 이제부터라도 북한당국이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이니, 그동안 지연되었던 북한의 경제난 탈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따라서 열악한 주민생활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핵심적인 목적이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경제강국이란 '우리식 사회주의' 다시 말하면 강력한 계획체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다. 북한이 직면한 경제현실에서 볼 때, 당면한 주민의 경제난 탈피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말하는 경제강국 건설문제 역시 체제적 요구이며 정치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당국의 정치적 요구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하기까지, 즉 완전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틀을 확립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년여 기간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한편에서는 계획영역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영역이 작동된다. 더욱이 계획영역은 침체되어 있고 시장영역은 주민사회에서 거의 지하경제로 움직이지만 날로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2년 안에 북한당국이 바라는 경제강국 건설은 커녕 계획기능의 마비로 인해 사회주의 계획체제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어떻게 하든 계획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체제수호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2009년에 북한당국이 행한 경제조치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5월부터 시작된 '150일 전투'와 11월에 단행된 '화폐 개혁'이다. 이 두 조치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력 동원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조치이어서 전혀 다른 경제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된 것이다.

최근에 넘어온 탈북자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들 두 조치 사이에 두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는 '150일 전투'와 '화폐 개혁' 모두가 김정은(운)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소문이고, 둘째는 양자 모두가 직장 복귀를 위해 장마당을 통제하는 북한당국의 강제조치였다는 것이다. '150일 전투'와 '화폐 개혁'이 김정은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소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주민사회에 후계자 지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왜냐 하면 '150일 전투'와 '화폐 개혁' 모두 북한주민의 불평불만이 높았던 터에 이와 같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들 조치들을 북한주민들이 환영하였다고 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주민들은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또한 양자가 모두 장마당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도 명확하다. 북한은 ‘150일 전투’의 경우, 전투 기간 중 노동 현장에서 벗어나 장마당에 나가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벌이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장마당에 나도는 주민들을 모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사회주의 체제하의 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이다. 화폐개혁의 경우도 방법은 다르지만, 장마당을 통제하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강도면에서 볼 때, ‘150일 전투’보다 더 강력한 상거래 차단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150일 전투’기간 중에는 북한주민들이 나름대로 간부들에게 ‘뇌물’ 등으로 장마당에서 장사할 수 있어서 그래도 장마당이 덜 위축되었다.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극심해졌다. 북한 당국은 화폐교환시 일정 한도만을 교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장사꾼’들이 힘들여 번 돈을 대부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자살자까지 나왔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장마당에서 상행위를 뿌리채로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역시 북한 화폐개혁의 배경이 비정상적 통화 팽창 조절 외에 공식 상품 유통망 강화 및 시장 역할 축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sup>5)</sup> 여기에서 공식 상품 유통망 강화란 사회주의식 상품 공급, 즉 배급제 강화를 의미한다. 북한당국에 의해 국가상품공급소를 통해 모든 상품을 공급,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가재정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몰수하려 한 것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마비된 계획 기능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획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계획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에서 계획의 통제기능은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북한은 이것을 “원(화폐)에 의한 통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김정일 등장 이래로 북한경제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원에 의한 통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내화)이나 무역은행(외화)을 통해 화폐 통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당은 물론 국가계획위원회에서도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가 없다. 북한이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끝으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5) 『조선신보』 (2009.12.4).

계획당국의 강력한 통제는 재정이 튼튼하게 보장될 때만이 가능하다. 북한과 같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경제에서 재정이 고갈되면 통제력은 현저히 약화된다. 당국은 화폐통제가 아닌 물리적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증대되어, 김정일과 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 역시 약화된다.

따라서 북한의 자체 식량공급의 대조건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및 강화에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완화하거나 개혁 개방을 확대한다면 논의할 의미가 없다. 식량문제를 감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및 강화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인 내용으로세분화 해보면, ①북한 농장원은 철저히 협동농장으로 복귀한다, ②식량 생산방법은 주체농법에 의거한다, ③북한의 식량은 균등분배가 아니라 성분에 따라 차등분배된다, ④ 7.1조치로 물량분배방식보다 가격분배(유통)방식에 중점을 둔다, ⑤ 선군정치 강화에 따른 대외고립으로 외부 도입량(특히 지원)이 중단된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 평가

#### 1.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의 개념과 규모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이란 북한이 자체의 능력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식량의 생산량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곡물도 포함된다. 이 외에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대외지원을 받아내는 경우에도 자체 식량 공급능력으로 포함될 수 있겠으나,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의 능동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북한의 자체 식량공급능력에서는 제외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래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공급능력은 수입까지 포함하여 연평균 460여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수입량보다 자체 생산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자체 생산은 92.5%를 차지한다. 따라서 북한의 자체 생산량이 줄어들면 북한의 식량 공급능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둘째,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 공급능력은 시기에 따라 매우 불안정 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체 생산이 홍수, 태풍, 해일, 가뭄,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거의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농작물 피해가 많은 데다가 수입 역시 외환 부족으로 연동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안정적인 식량

〈표 1〉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 규모 추이

단위: 만 톤

연 도	자체 생산·공급량	수입량	합 계
2005	431	90	521
2006	454	39	453
2007	448	30	478
2008	401	15.6 <sup>1)</sup>	416.6
2009	431	20.3 <sup>1)</sup>	451.3
2010	411	-	-
평 균	429	39	464

\* 자료: 통일부

\* 주 1): 2008년 및 2009년 수입은 KREI 『북한농업동향』 제11권 제4호(2010.1), p.164을 인용한 것으로 대중국 곡물 수입 실적임.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로 각 연도마다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자체 생산량이건 수입량이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홍수 피해가 컸던 2007년도와 남한의 비료 공급이 중단되었던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sup>6)</sup> 일기조건이 좋은 상황에서도 자체 생산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여 왔지만 식량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량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북한이 다른 품목의 수입을 줄이고 식량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식량 수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직된 계획체제의 역학적 구조상 이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은 등락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불안정속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이래 지난 6년 동안의 연평균 식량 공급능력은 460여만 톤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논의의 목적상 식량 수요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식량 수요량이 어떠한지 북한은 외부 지원량과 함께

6) 2007년도와 2009년도의 생산량은 〈표 1〉에서 각각 2008년, 2010년 생산량이 된다. 북한의 자체 공급량이 된다. 북한은 2007.7~8월의 집중호우, 9월 태풍 12호(위파) 상 잇따른 기상상황 악화로 식량 생산이 감소하였다. 통일부, 『2007년 북한경제종합평가』 (2008.1), p.20.



상기의 식량 공급량으로 살아왔다.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고, 다행히도 그동안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지원과 함께 일기조건도 양호하여 연이어 작황도 좋았다. 또한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해 중국을 통해 주민 차원에서 식량 수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소토지, 텃밭 등에서 보조적으로 식량 생산이 북한의 식량 공급에 일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식량 부족 문제를 그런대로 메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본격화하는 상황 하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농장원 개인이 개간하여 의욕적으로 경작하던 소토지를 등록시켜 집단영농화할 경우 농업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다. 또한 주민 개인을 직장으로 강제 복귀시킬 경우 장마당이 위축됨으로써 장마당에서의 사적인 식량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로의 회귀가 북한의 대외 경제 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천안함피격 사건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함께 경제제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 친선국가라고 하는 중국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북한은 이미 2006년부터 일본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타격

이 적지 않다.<sup>7)</sup> 따라서 북한의 대외 무역 및 경험은 이번이 없는 한 확대되기 어려우며 외환 보유하고 역시 증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강화·고수하는 한, 외화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수입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북한이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자체적인 식량 공급능력은 더욱 불안정해지거나 저하된다. 이에 따라 식량부족량은 기존보다 확대될 것이며 식량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배급보다 당국이 지급하는 낮은 생활비(임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로 인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중단 사태로까지 확대되는 경우 북한은 다시 아사자가 발생하는 위기에 처할 지도 모른다.

## 2. 분배면에서 본 북한의 식량 공급 능력

북한은 2005~10년 기간 중 연평균 464만 톤의 곡물을 식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곡물공급

7) 북한당국은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로 수출선을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자국 상품수출가격 하락, 중국산 수입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본산 밀거래도 전개되는 등 일정한 정도의 타격을 입고 있다. 재단법인 공동문제연구소, 『탈북자를 통해 본 최근의 북한실태 조사』 (2009), p.35.

능력'이지 '식량 공급능력'은 아니다. 이 가운데는 공업용, 종자용, 사료용, 감모분 등 비식량용이 포함되어 있다. 곡물 중 비식량용은 대략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8)</sup> 그리고 비식량용 수요량은 아무리 북한이 식량난에 처해 있더라도 경제 및 영농활동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몫이다. 북한당국도 생산량 모두를 식량용으로 소비하는 무모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확한 식량공급능력은 464만 톤의 75% 수준인 348만 톤이 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 공급능력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균등분배가 아니라 계층별로 차등분배를 실시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민들을 출신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출신성분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주민은 성분계층별로 분류되고 사회적으로 직종과 직위도 달리 부여된다. 그리고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그 생성 자체가 사회적 보수의 정당한 배분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계층구

조는 인위적인 계급정책, 구체적으로는 정치우선적 경제관리에 의해 나타난 다분히 정치적인 산물이다.<sup>9)</sup>

이와 같이 북한사회는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계층에 따라 소비생활양상도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소수의 고위계층일수록 중앙당국의 정치권력적 보장에 힘입어 여유로운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절대다수의 일반계층일수록 생활은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식량 배급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북한사회에서는 당성(정치적 충성심)에 기초하여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으로 출신성분을 크게 3가지 51개 부류로 분류, 적용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성분 분류는 북한당국에 대한 충성도에 주안점을 둔 정치사상적 분류방법으로서 '온 사회를 정치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날까지 거의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주민의 경제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는 출신성분에 따라 고도의 불평등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핵심계층의 수는 전체 인구 가운데 28%

8) 통일부,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p. 57 참조.

9)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에 대해서는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710~712;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p.81~84 참조.

10) 통일부, 『북한개요』 (2003), pp. 326~327 참조.

이고 동요계층은 45%이며 적대계층은 27%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1)</sup> 여기에서 핵심계층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북한의 지배계층을 말하는 것으로 당·군 및 내각의 고위 간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당·정·군의 간부로 등용되며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등에 있어서도 타 계층과 분리하여 각종 특혜를 받는다. 또한 동요계층은 핵심계층의 주변부류로서 출세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중간 관리계층을 일컫는다. 이들은 각종 하급 간부 및 기술자 진출이 가능하며 이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핵심계층으로 승격된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이들 중간 관리계층의 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계층은 한편으로는 맹목적으로 당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에 대해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대계층은 농장원, 근로자 등 북한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피지배 계층을 가리킨다.

경제적으로 볼 때 핵심계층은 북한사회에서 온갖 기득권을 향유하는 있는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은 피지배계층으로서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피해자로 나타난다. 특히 적대계층은 북한사회에서 정치사상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최하위의 빈곤계층에 속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지배계층인 핵심계층과 피지배계층인 일반계층의 양 계층으로 나누기로 한다. 따라서 일반계층에는 농장원, 근로자, 상인들뿐만 아니라 중간의 하급 관리계층도 포함된다.

북한의 식량 배급은 신분, 직업,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 예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에게는 주 3회 백미 800g과 각종 부대식품이 정상 공급되는 반면, 일반주민에게는 월 2회에 걸쳐 직종·나이별로 잡곡 100~900g이 배급되며 이것도 경제난 이후에는 중단되기 일쑤이다. 잡곡비율도 지역과 신분에 따라 차이가 크다. 통상 평양과 휴전선 부근지역에서는 쌀과 잡곡의 비율이 6:4 정도로 쌀이 많은 편이고, 기타 지역은 3:7 정도로 잡곡을 많이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sup>12)</sup>

그러나 이와 같은 신분과 직종에 따른 식량의 배급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래로 협동농장에서 실적에 따른 분배 원칙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식량 분배도 변화되고 있다.<sup>13)</sup> 최근에는 이러한 실적분배 원칙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11) 연합뉴스, 『북한 용어 400선집』 (1999), p. 208.

12) 같은 책, p. 226.

13)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24~26.

〈표 2〉

계층별 북한의 연간 식량 공급능력

구 분	인구수(천 명)	공급규모(만 톤)	1인당 공급량(Kg)
핵심계층 몫	6,507	142	218
일반주민 몫	16,734	206	123
합 계	23,241	348	150

\* 자료: 〈표 1〉의 평균 및 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산출

그러나 정치적 성격의 계층별 차등분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핵심계층은 체제유지 목적으로 충분한 식량 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나머지 여유분 식량을 겨우 구득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양상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주민 가운데 중간의 관리계층이 존재하지만 이들도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배급량이 다른 일반주민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북한의 핵심계층은 1인당·1일 평균 600g 이상의 식량을 전량 공급받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특수한 신분구조상 핵심계층에게 식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핵심계층에 우선 공급하

고 난 나머지 식량이 비로소 일반주민의 몫이 된다는 현실이다. 이것은 북한이 지금까지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관리방식과 밀접히 관련된다.<sup>14)</sup> 따라서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분배 몫은 핵심계층에 대한 식량공급량만 알 수 있으면 소거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실질적인 식량 공급능력은 비식량용을 제외한 348만 톤이다. 그리고 2005년 이래 북한의 연평균 총인구수는 2,324만명이며<sup>15)</sup>, 이 가운데 핵심계층은 650여만 명, 일반주민은 1,67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공급기준에 따라 식량 공급량을 계산하면 〈표 2〉과 같이 산출된다.

북한의 핵심계층은 식량의 우선공급대상이며 그 총량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14) 북한은 경제관리를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당의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 배합의 원칙,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 등 4대 경제관리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식량을 우선 기존 정치세력에 분배하고 있다.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710~712;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p.81~84.

15) 여기에서 자체 식량공급능력의 규모를 연평균으로 하였으므로 총인구수도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2005~2010년의 연평균 인구를 적용하였다. 2009~2010년 인구는 필자가 자체 추정하였다. [http://www.bok.or.kr/보도·법령자료/북한경제자료/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2010.5.11\)](http://www.bok.or.kr/보도·법령자료/북한경제자료/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2010.5.11))

간 142만 톤을 웃돌고 있다. 이 규모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그 공급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만 하는 필수 소요량이 된다. 이 정도의 식량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북한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주민에 대한 식량공급량은 총 식량공급량의 약 60% 수준인 206만 톤으로서 1인당 공급량으로 보면 핵심계층의 절반 수준을 약간 웃도는 연간 123Kg(1일 337g)에 불과하다. 이것은 WFP가 북한을 긴급 식량지원국가로 분류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준(1일 2,130Kcal)의 75% 수준으로 낮추어 잡아 산정한 연간 기본 소요량 167Kg보다도 적은 양이다.<sup>16)</sup>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로의 회귀 및 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차등 분배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차등분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식량 공급물량을 늘이지 않고서도 자체적인 공급능력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하면, 일부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량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김정일과 당에 대한 충성과 체제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대다수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광범위하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식량이 정상적 수요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능력으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방법은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일정수준 이상의 식량공급량이 확보되어 최소한 주민의 생존 수준은 보장해 줄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상조건 양호, 비료 지원 등에 따른 연이은 풍작,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국경무역을 통한 식량의 사적 거래 등에 힘입어 북한당국의 차등 분배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매우 불투명하다.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농업기반이 열악한 북한 농업의 실정으로 볼 때, 앞으로도 400만 톤 이상의 지속적인 풍작을 보장하기란 매우 어렵다. 주체농법의 틀 속에서 집단영농을 함으로써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고 장마당 통제로 식량의 사적 거래는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 생산량은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이 차등 분배를 실시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 공급량은 더욱 줄어들어 식량 공급능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선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16)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November 2004.

### 3. 북한주민의 식량 소비수준

북한주민의 최저생계비를 계산해 낸다면, 일반주민이 겪고 있는 경제난의 체감도(體感度)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민소비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일반주민이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는 소비 품목, 소비 장소와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는 데 연유한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감안하여 일반주민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식량 수요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북한의 최저생계비로 개념화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는 쌀, 옥수수 등 주식의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북한경제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주민이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특히 쌀 및 옥수수)과 식량가격을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기로 한다.

FAO/WFP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주민의 영양섭취량은 일반사람의 약 75% 수준으로 보고 이를 통해 연간 식량필요량을 추정한 바 있다. 즉, 북한주민의 영양섭취량을 하루 평균 기본 영양섭취량(2,130kcal)의 약 75% 수준인 1,600Kcal로 보고, 연간 식량 필요량을 167Kg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17)</sup> FAO/WFP의 추정에 따를 경우, 북한주민 1인당 식량 필요량은 월평균 13.9Kg에 이르며, 하루 평균으로는 458g(한 끼당 153g)에 이르는 셈이 된다.

북한에서 장마당을 통해 거래되는 식량 가격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여 왔지만, 2009년의 경우 당시 화폐기준으로 쌀은 2,500원/Kg, 옥수수는 1,500원/Kg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8)</sup> 이러한 가격을 토대로 1인당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면, 쌀로만 소비할 경우에는 월 34,750원, 옥수수만 소비할 경우에는 월 20,85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83,400~139,000원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당 임금소득은 부부간 맞벌이를 가정하더라도 월 평균 최대 11,600원 내외의 수준으로 추정된다.<sup>19)</sup> 그러므로 북

17) FAO/WFP, *ibid.*

18) 극동문제연구소, 전계서, pp.44~48.

19) 홍성국·윤홍석, “북한의 GNI 분배구조와 주민의 소비생활 수준”, 북한연구소·북한학회, 『북한학보』 34집 1호(2009), p.127. 2010년은 필자(홍성국)가 추가로 추정한 것이다.

〈표 3〉 북한주민의 월 평균 최저생계비와 임금소득

년도	1인당 최저생계비	가구당 최저생계비	가구당 임금소득	비 고
2009년	20,850~34,750원	83,400~139,000원	최대 11,600원	구권기준
2010년	4,170~8,340원	16,680~33,360원	최대 1,000원	신권기준

\* 자료: 2009년도는 FAO/WFP 및 극동문제연구소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임.

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소득은 가구당 요구되는 최저생계비의 8~14% 내외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하여 2009년 11월 화폐 개혁 이후의 최저 생계비와 가구당 임금소득을 산출하여 보자. 2010년 3월 현재 북한의 쌀 가격은 500~600원대/Kg에서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20)</sup> 이것이 사실이라면, 옥수수 가격은 300~400원대에서 거래된다는 셈이 된다. 북한의 임금은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대체로 내각의 재정성에서는 월 300~400원 선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21)</sup>

이를 토대로 2010년도 1인당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면, 쌀로만 소비할 경우에는 월 6,950~8,340원, 옥수수만 소비할 경우에는 월 4,170~5,56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680~33,360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가구당 임금소득은 부부 간 맞벌이를 가정하고 북한당국이 물가상승

을 고려하여 인상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 평균 최대 1,000원 내외의 수준에 이르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소득은 가구당 요구되는 최저생계비의 3~6% 내외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화폐개혁 이후 최저생계비는 이전보다 대폭 상승하고 실질적인 임금소득은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교환비율을 감안할 때,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2009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구당 명목임금은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식량가격 상승으로 북한주민의 최저생계비와 임금소득간의 격차가 화폐개혁 이전보다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것은 화폐개혁이후 장마당 통제와 더불어 북한의 식량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7.1조치 이래로 북한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모든 경제단위에 대해 물량목표(物量目標)가 아닌 액상목표(額上目標)로 관리

20) 『열린통신』 제75호(2010.4.10).

21) 『열린통신』 제75호(2009.12.15).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식량 분배도 특정계층을 제외하고는 물량 분배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사회주의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액상분배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계층의 물량분배(식량 배급)와 장마당 거래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값싼 배급용 식량의 부정 유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액상분배로의 통합이 절실한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이 지급하는 낮은 수준의 생활비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공장기업소에서 주는 생활비로는 필요한 식량을 구득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이 사회주의로 복귀하여 경제강국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최저 생계비를 현 수준보다 1/15 정도 낮추거나, 아니면 주민의 임금 수준을 15배 이상 높여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자체 식량공급능력은 취약하다.

#### Ⅳ. 맺음말

지난해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시도하면서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노력쟁운동인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가 하면, 개인 소유의 자금 물수를 위해 화폐개혁까지 단행하였

다. 또한 주민 개인의 외화사용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장마당을 통제하고 흩어진 근로자들을 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량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식량 문제는 북한 체제 유지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이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로의 회귀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자체적인 생산량 증대와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자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곡물 재배면적의 확대, 영농자재의 공급 증대, 기술개발, 농업관리체계의 개편이 주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수단 모두가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중 북한이 비교적 용이한 수단을 든다면 농자재의 사용을 증대시키는 일이며 그 중에서도 비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비료의 양도 현재는 소요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

외부로부터의 식량 조달은 상업적 수입인데, 이는 대외신용을 채고시키고 외환 보유고를 증대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다. 매년 무역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데다 유엔 안보리의 재재 이후 무기류 수출을 통해 무역




적자를 메워오던 것도 이제는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식량 수입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나 그것도 북한이 원하는 물량을 수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 등지에서 매년 20만톤 내외의 식량을 수입하였을 뿐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은 차등분배 방식으로 자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부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분배 몫을 높이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낮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주민들에게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 공급을 보장해 줄 때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일정수준이라도 식량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하가 되면 북한이 바라는 사회주의로의 회귀 노력 즉, 북한이 말하는 ‘경제대국’의 완성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북한주민은 식량공급기준에 의거할 경우 최저생계비와 실질임금간의 갭이 너무 크다. 따라서 북한은 양자의 갭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이완된 사회주의 체제를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7.1조치에 따라 식량의 분배방식을 종래와 같은 물량분배보다는 액상분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기간 부정부패와 맞물리면서 물량분배의 폐단이 너무 심각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 공급능력 확대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낮추든지 실질임금을 높이든지 그 어떤 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 확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수록 자체 식량공급능력 확대에는 어려움이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 약화는 체제의 약화를 자초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봉착한 정치경제적 딜레마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회주의 질서 정비 및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회주의 조치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자료〉

- 연합뉴스, 『북한 용어 400선집』(1999).
- 재단법인 극동문제연구소, 『탈북자를 통해 본 최근의 북한실태 조사』 (2009).
- 조선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1995).
- 조선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1985).
-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통일부, 『북한개요』 (2003).
- \_\_\_\_\_,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 \_\_\_\_\_, 『2007년 북한경제종합평가』 (2008).
-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제11권 4호(2010.1).
- 홍성국, 윤홍석, “북한의 GNI 분배구조와 주민의 소비생활 수준”,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34집 1호 (2009).
-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November 2004.
- <http://www.bok.or.kr/보도·법령자료/북한경제자료/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2010.5.11).
- 『열린통신』 제55호(2009.12.15) .
- 『열린통신』 제75호(2010.4.10).
- 『조선신보』 (2009.12.4).